ISSUE BRIEF

이슈브리프 759호
(2025.11.17)

북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2025' 등에서 나타난 금융 정보화 동향과 함의: 전자결제체계를 중심으로

제759호

변상정 북한연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북한은 전자결제를 비롯한 금융 정보화를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폐막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2025'에서는 510여 개 기관이 1,700여 건의 성과를 전시했으며, 특히 '삼흥전자지갑' 가입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삼흥, 전성, 만물상 등 다양한 전자지갑이 북한의 식당, 상점, 교통수단 등에서 사용되고, 송금, 요금 납부, 충전도 가능하다. 평양 시내에는 '화원' ATM기가 설치되는 등 금융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다. 전자결제체계는 조선중앙은행과 평양정보기술국의 '전성'(2020)을 시작으로, '울림', '강성', '삼흥전자지갑' 등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삼흥경제정보기술사는 경제·상업·교통 등 전 분야의 통합관리 앱을 개발하며 북한 핀테크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전자결제 확산의 법적 기반은 2020년 '이동통신법' 제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자결제법'(2021)과 시행 규정(2022), 개정 전자결제법(2023)을 통해 기관과 주민의 의무 가입, 미이행 시 벌금 부과 등이 규정되었다. 이는 현금 유통 축소와 화폐 자원 통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김정은의 '전면적 금융정보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금융의 투명성 및 편의성 제고는 물론 내부 자금 동원과 금융 통제 강화가 목적이다. 주민들은 전자결제카드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소비를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유휴화폐를 은행권으로 흡수하고 화폐 흐름을 감시하고 있다. 양강도에서는 전자결제카드 발급과 금융교육이 의무화되었는데, 북한 당국은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직접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 역시 지방경제의 정보화와 자금 조달을 위해 전자결제체계 확대를 요구한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전자결제체계 이용도 늘고 있어서 향후 북한 핀테크 산업 성장과 경제 디지털화 가속이 예상된다.

주제어 : 북한, 김정은,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금융 정보화, 전자결제체계, 삼흥경제정보기술사, 삼흥전자지갑, 핀테크 산업, 경제 디지털화

지난 10월 30일 북한의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2025'가 막을 내렸다. 11월 2일자 『노동신문』은 올해 평양 과학기술전당과 국가자료통신망 사이트인 '전국정보화성과전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전람회에 510여 개 단위(기관·단체)가 출품한 1,700여 건의 성과가 전시돼 지난해 480여 개 단위의 1,500여 건보다 규모가 커졌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삼흥전자지갑' 가입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해 북한의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것이다. 삼흥경제정보기술사가 개발한 전자지불체계인 삼흥전자지갑은 2023년 북한 매체에 처음 언급된 결제 서비스이다.

지난 8월 8일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에서도 다양한 전자결제체계가 개발, 보급돼 휴대전화에 의한 전자결제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삼흥, 전성, 만물상 등의 전자지갑이 식당과 상점, 지하철과 무궤도전차 등 대중교통수단에 이용되고 있고 송금과 입금, 택시요금 지불,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요금 충전 등도 가능하다. 아울러 2023년 인상된 노임이 현금이 아닌 전자결제카드로 지급돼 양곡판매소나 국영상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앞서 4월 7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도 도시지역 주민들, 상점 운영자, 청년층 중심으로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올해 3월 말부터는 대도시나 도 소재지에서 새로 영업 허가를 받을 때 내화와 외화원 전자결제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인민위원회에서 허가증을 내주지 않을 정도로 북한 당국이 전자결제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결제서비스 보급과 더불어 평양 시내에 자동입출금기(ATM)도 설치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개업한 화원전자은행에서 개발한 ATM기 '화원'이 평양시와 지방의 주요 백화점, 병원, 약국, 식당, 체신소, 편의시설 등 공공장소에 도입되는 등 금융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다. 여러 매체들의 보도대로라면 북한의 이동통신 기술과 전자결제체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결제체계 개발·보급

2023년 10월에 처음 소개된 '삼흥전자지갑'을 개발한 삼흥경제정보기술사는 최근 수년간 최우수 IT기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현재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과 상품 판매, 기관 간 거래, 관광 및 차량 움직임, 다양한 사회적 지원, 투자 요청, 각종 사용요금 결제 등 국가관리와 통제 영역에 대한 앱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제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평양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되는 4G 스마트폰에 지원하고 있다. 강영실(2025)에 의하면, 삼흥경제정보기술사는 기존 조선컴퓨터센터(KCC) 삼흥정보센터의 후신인 것으로 보인다. 최초로 현장(오프라인)에 도입된 전자결제체계는 2020년 중앙은행과 평양정보기술국이 공동 개발한 '전성'으로, 2020년 10월 21일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전성'이 "사용자들이 지능형손전화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봉사대금 및 각종 사용료 등 모든 대금 지불을 실현하는 새로운 현금거래시스템"이라고 소개하였다. 그 후 전성카드와 나래카드(외화카드)를 '전자상업봉사체계'(온라인 상품 판매, 주문, 결제, 배송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체계인 '울림'이 개발되었다. 전자상업봉사체계는 2015년 '옥류'를 비롯해 만물상, 고려항공, 내나라 전자백화점 등 20여 개가 개설되었다. 2020년 10월에 QR코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간편결제 기능이 추가된 '울림 2.0'이 개발된 결과, 중앙은행에서 발급한 전성카드와 나래카드 외에도 지방 무역카드, 무역기관이 발급한 카드 등 등록 가능한 카드의 범위가 확대돼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강성망 손전화 봉사체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강성'이라는 전자결제체계도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강성 2.0'까지 출시됐는데,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에서 개인과 기업소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전자결제체계 확산의 법적 기반 마련

2021년에 신설된 정보산업성은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재정·금융 부문에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금융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고 국가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결제법'을 제정하였다. 전자결제법은 전자결제제도 확립과 현금 유통량 축소 및 무현금 유통량 확대를 사명(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물론, 현금 유통 축소와 화폐 자원 통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이 북한 전자결제시스템 확산 과정의 특징이다. 전자결제시스템 운영 및 관리 소홀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노동교양(강제노동)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2022년 1월에는 전자결제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전자결제법 시행규정'이 제정돼 기관·단체와 개인을 전자결제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금융거래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2년 후인 2023년 7월 북한은 전자결제법을 개정해, 법률상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이용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였다. 전자결제 미도입에 대한 벌금 부과와 그 대상에 단체, 기업 외에 일반 주민을 포함시킨 것은 단체·기업이나 주민의 자금 은폐, 전자결제 확대에 대한 저항 등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며, 북한 당국은 문제점을 보완해 전자결제체계를 전국에 적극 확대·시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흥전자지갑 가입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게 된 것은 전자결제로 인한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전자결제법 시행규정과 개정 전자결제법의 벌금 부과 조항의 영향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결제체계 확산의 함의

일반적으로 금융 정보화는 금융의 투명성, 편리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 밖에도 당국의 다양한 의도가 금융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이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모바일 기기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신기술이 IT 발전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세계의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추격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다종의 전자결제체계 등 금융 정보화를 위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정보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의 '단번도약'을 이루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북한 당국은 금융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보유한 자금을 공식 전자결제망으로 끌어내고, 지방은행 및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전자결제시스템 활성화는 김정은의 '전면적 금융 정보화' 지시에 의한 것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세계적인 비대면 경제 확산과 외화난 가운데 내부 자금 동원과 금융 통제 강화 차원에서 전자결제시스템 개발과 보급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개인과 시장에 축적돼 있는 북한 원화와 외화 등 유휴화폐를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전자결제망을 이용하게 하면 화폐 유통을 관찰하고 감독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북한 당국은 개인 환전상과 이관꾼(송금업자)들의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은행, 카드 또는 전자결제체계 사용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북한 당국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챙기고 있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 경제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생산뿐만 아니라 상업과 금융체계도 정보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은 지방은행의 전자결체체계 사용을 확산시켜

지방의 돈주와 주민이 보유한 유휴화폐를 끌어냄으로써 지방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전자결제 확산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금융 정보화 정책은 앞으로도 적극 추진돼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결제법 제정 이후 당국이 회유·강압 등 다양한 시책으로 전자결제카드 사용을 장려한 결과, 가구마다 전자결제카드를 최소 한 장씩은 사용하게 되었다. 열악한 전력 사정으로 인한 결제 오류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피해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카드 사용을 통해 송금과 거스름돈 계산의 편리성 등의 이점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자결제체계의 확산 전망은 밝아 보인다.

전자결제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당국의 노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강도가 처음으로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은행 계좌 개설 및 계좌와 연계된 전자결제카드 발급을 의무화한 바 있다. 향후 중앙 당국은 양강도의 금융정보화 성공 사례를 선전하면서 다른 지방들도 양강도의 '모범사례'를 따라 전자결제체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 및 사용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층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하나면 모든 국영상점과 국가에 등록된 개인 상점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으므로 관련 서비스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주민들의 호의적 반응에 부응하여 삼흥경제정보기술사 외에도 여러 정보기술사나 교류사에서 다양한 전자결제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결제카드의 호환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향후 북한의 핀테크 산업 성장과 경제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